

부산 “해양반도체 산업단지 육성”… 글로벌 30위권 목표

‘K-해양반도체 얼라이언스’ 출범
조선·반도체 융합 협력 본격화
설계·생산 반도체, 실증·수요 조선
투자보조금·세제혜택 지원 확대

부산시는 19일 오후 대한민국 해양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K-해양반도체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정동만 국회의원과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성창용 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등 주요 내빈과 SK키파운드리, 디비(DB)하이텍 등 반도체 기업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사 대표 및 임원 등 산학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부산을 ‘차세대 해양반도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민간 주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중추 산업인 조선·해양과 반도체 산업 간 연계를 통해 핵심



부산시청 전경.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K-해양반도체 얼라이언스를 국가 반도체 정책과 조선·해양 산업 전략과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기조와 남부권 산업 혁신 전략, 조선·해양 디지털 전환 정책과 연계해 대형 국책

사업 유치와 민간 투자 확대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장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영도 부스트벨트 ▲해운대 제2센텀 도심융합특구를 연계한 혁신벨트를 조성하고, 해양반도체 산업 단지(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30위권 내로 진입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을 통해서 민간의 주도적 차세대 해양반도체 공급망(밸류체인) 구축을 본격화한다. 반도체 기업은 해양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및 전력반도체의 설계·생산을 담당하고, 조선기업은 국산 해양반도체의 수요처이자 양산 실증을 위한 가늠테(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 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시는 ▲국민성장펀드 유치·지원 ▲최대 33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보조금 ▲기획발전재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정례적인 협의체 운

영 ▲공동 프로젝트 발굴 ▲국제 협력 확대 등을 통해 K-해양반도체 얼라이언스를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반도체 산업의 응용 분야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유망 기업 및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해양 분야 반도체 기술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전력반도체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오늘 출범하는 K-해양반도체 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적용 분야를 해양으로 확장하는 첫걸음이자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로, 부산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양반도체 성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확대

전남도는 올해 총 2472억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경영 안정과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107개 축산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환경친화 축산기반 구축과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등 5대 전략 방향 아래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친화 축산기반 구축과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191억원, 녹색축산 육성기금 200억원 등 14개 사업에 528억원을 들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도

유망·우수축제 12개 선정

경북도는 지난 16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2027년 경북을 대표할 지정 축제 14개와 미소축제 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경쟁력 있는 축제 콘텐츠 발굴과 자생력 있는 축제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해 향후 2년간 콘텐츠 개발과 축제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최우수 축제 2개, 우수축제 6개, 유망축제 6개를 선정했다. 최우수 축제로는 구미 라면축제와 김천 김밥축제가 이름을 올렸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남도

무역수지 239억달러 흑자

경남도는 지난해 연간 수출이 48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3.7% 증가했고, 수입은 241억 9000만 달러로 소폭 감소해 연간 무역수지 239억 1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발표된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 수출은 38억 5000만 달러, 수입은 22억 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15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남도는 2022년 10월 이후 3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무역 구조와 수출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전주시

복합스포츠타운 공정 ‘순항’

전주시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추진 중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안정적인 공정 속도를 보이며 전주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6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야구장 건립사업을 포함한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복합스포츠타운은 기존 월드컵축구경기장을 중심으로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스포츠카치센터, 국제수영장 등이 들어서는 공공체육시설 집적화 단지다.

/전주(전북)=김명수 기자 qunms@

경주, 발전소 주변 주민 복지용자 확대

가구당 최대 2000만원으로 한도 ↑

경주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생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주민 복지용자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6년부터 주민 복지용자 사업의 가구당 용자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번 용자 사업에는 총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갑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등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용자 금리는 연 1.5%의 저금리를 유

지해 주민 생활 부담을 최소화하고, 2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 복지용자금은 가구당 최대 2천만 원, 기업 유치 및 소상공인 지원 용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박영숙 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은 “이번 용자 한도 확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사업체 52곳에 총 9억 9천5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창원, 청년 공영자전거 ‘누비자’ 요금 지원

오늘부터 1350명 선착순 모집

창원시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일부터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 사업 신청을 선착순으로 1350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 사업은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최초 시행 이후 2024~2025년 청년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

는 등 청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올해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한해 복무기간을 고려해 청년연령을 최대 3세까지 연장 적용한다.

사업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창원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시는 매일 신청자격을 검토해 익월 5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일부터 누비자 연회원 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자동가입

전 군민 생활안전망 구축

울진군이 군민 대상 재난 피해 보장을 강화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총 1억 원 한도의 전국 최고 수준 보장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모든 울진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이 대상이다.

보험은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화상수술비, 농기계사

고 후유장애,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재난 항목을 포함한다. 단, 야생동물 관련 보상은 울진군 관내 사고에 한정된다.

보장 항목은 총 36개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10개 항목은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최소 보장 금액은 10만 원 수준으로,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울진군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군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재난 대응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영덕군, 생애주기 맞춤 인구정책 총정리

‘인구정책 가이드북’ 발간

영덕군이 군민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총망라한 ‘2026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올해는 신규 정책 20건이 추가돼 총 104개 사업이 수록됐다.

군은 임신과 출산, 청년기, 노후 등 생애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정리한 ‘2026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올해 책자에는 총 7개 분야, 104개 정책이 수록됐다.

분야는 ▲전임·결혼·군민 ▲임신·출산 ▲보육·교육 ▲다자녀 ▲청년·주거

▲노후 ▲귀농·귀촌·귀어로 구성됐으며, 지난해보다 20개 사업이 추가됐다. 군은 군민 누구나 자신의 삶의 시기에 맞는 정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공감문화센터 유아 놀이터와 전통시장 어린이 체험 공간 등 놀이시설 확충, 청소년 수련관 건립, 중·고등학교 대상 심화학습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리턴투 영덕’ 청년창업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 대상 주거 마련 비용 및 이사비 지원도 새롭게 담겼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